

헤럴드경제

CLOSE X

PRINT

“문화기금 운용 지방이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이 종래 중앙행정기관에서 일괄 나눠주는 방식에서 지방으로 상당 부분 이관된다.

또 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예술행정가와 일반 예술애호가 등이 참여하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심의구조로 바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을 포함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 국립예술기관 특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새정부 문화정책 기초 및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금지원의 편파성 논란을 빚어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대폭 지방에 이관, 총사업 예산의 32%인 248억원이 지방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지원방식도 예술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사후 지원, 간접 지원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국제교류 역점 프로그램, 신진예술가 육성, 장편서사문학 계발에 집중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성의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는 종래 장르별 구성에서 이슈별·기능별 TF소위 형태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회와 분리,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또 국립예술기관을 특성화해 국가브랜드로 만들어간다는 전략 아래 종래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없애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

국립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예술 창조를 담당하며 국립국악원은 전통공연 예술의 원형 보존, 예술의전당은 오페라, 발레, 고전음악 등 서양 장르 공연,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은 무용 중심, 대학로복합공연장 대극장은 연극 중심 극장으로 특성화된다.

유 장관은 “국립예술기관과 단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며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돈 버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2008.09.03

Copyright 2001 ~ 2004 Herald Media INC. All rights reserved.